

오피니언

光日春秋

이돈희



한 국가의 제도적 교육에는 복지(福祉)와 투자(投資)라는 양면적 동기가 내재해 있다. 복지로서의 교육은 국민으로 하여금 지식, 규범, 기술 등을 익히게 하여 더욱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봉사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반면에 투자로서의 교육은 국민의 지력, 기능, 심성 등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의 충원을 기하고 안위와 번영의 역할을 마련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러나 투자적 동기에서 창출된 교육 기회는 사회적 투자의 효율성을 예견할 수 있게 하는 잠재력의 소유자에게 주어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일차적으로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양면성

우리 교육의 고질적 질병으로 되어 있는 대입정책의 난맥상도 투자로서의 고등교육과 복지로서의 보통교육의 사이에서 생기는 기능적 상충이 문제로서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대학의 능력주의적 선발제도는 교육의 복지적 가치를 누구나 수혜도록 하려는 하급학교의 평등주의적 교육운영과 불가피하게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즉 경쟁의 원리와 분배의 원리가 충돌한다.

그러나 교육에서의 경쟁의 개념은 다른 맥락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즉, 교육받은 어린 젊은이들을 경쟁 속에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교육 담당자들이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수요자의 경쟁이 아니라 공급자의 경쟁이다. 교육 서비스의 공급자 측에 적용되는 경쟁체제는 투자적 목적으로나 복지적 목적으로나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대하여 흔히 "신자유주의"라는 꼬리표를 붙인다.

신자유주의적 사고는 수요자중심의 정책과 교육 서비스의 경쟁체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수요자의 선택과 시

어찌면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주도하는 세계, 거역할 수 없는 대세 속에 살아야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환상의 이면에는 심각한 우려의 눈이 주시하고 있다. 시장의 논리가 본격적으로 지배하면, 그것은 교육의 상품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 프로그램, 교원이 모두 상품화된다. 극단의 경우 소모적 경쟁의 상태에 놓이게 되면, 유실되는 자원이 발생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는 교육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 과대선진이나 가격담합과 같은 상품시장의 부조리가 교육세계에 일반화될 수도 있다. 또한 교육장의 시장화는 교육수혜의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 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경쟁풍토는 전통적 교육공동체의 해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정당화는 경쟁에 의한 질관리보다 교육수요자의 선택적 폭을 확대한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선택 폭의 확대는 경쟁체제의 구축, 어찌면 자칫 약성적 경쟁체제로도 이어지는 것이므로, 신자유주의적 시나리오는 '환상적 기대'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수반하는 역기능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재앙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서남권 발전 태스크포스' 역할 주목한다

전남도가 13일 정부의 '서남권 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전남도의 T/F는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과 중앙부처 건의, 정보 제공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한다. 이는 지난달 24일 정부의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발표로 중앙정부 차원의 각종 후속 조치가 예상된데 따른 전남도의 대응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T/F 구성을 계기로 '서남권 발전 계획'에 대한 예정된 후속 조치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서남권 종합발전 구성(안)에 따르면 연말까지 총리실 산하에 '서남권 등 낙후지역투자촉진단'을 구성하고 내년 5월까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키로 돼 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에 '투자촉진특별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서남권 발전계획'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자

금 마련의 어려움을 들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또다시 대규모 개발계획을 추진해 부동산 투기만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정된 후속조치마저 미뤄진다면 서남권 발전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 초부터 대선정국에 돌입할 뿐 아니라 임기 말에 접어들어 참여정부의 추진력도 크게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자칫 서남권 발전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서남권 발전계획이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투자단 구성이나 특별법 마련 등 후속조치들이 당장 시행돼야 한다.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효율적인 서남권 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전남도의 T/F는 정부가 약속한 후속조치들이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수능시험결과 유출 경위 철저히 밝혀야

대입수능능력시험 결과가 당국의 공식발표보다 하루 앞서 12일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그것도 한 사설 입시학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수능시험 결과가 공식발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사실확인의 손에 들어가 공개됐는지 한심스럽다.

유출된 자료에는 수능 원점수와 표준점수, 도수분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학원 홈페이지는 입시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을 입증하듯 불과 2~3시간만에 2만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학원에는 자료의 진위 여부를 묻는 전화가 빗발쳤다. 학원측은 곧바로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삭제했지만 네티즌들이 각종 포털의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퍼나르면서 혼란을 부추겼다고 한다.

학원측은 지방의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뢰가 가지 않는다. 설사 학교나 교목청 등에서 자료를 입수했다더라도 문제가 심각하다. 일선 학교나 교육청, 교육

부 등 관련기관과 학원의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교육 당국의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교육 당국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 교육부는 수능시험 결과가 중요한 자료는 아니지만 사실확인에 남은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정평이 나있다. 나름대로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 입시정관심을 입증하듯 불과 2~3시간만에 2만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학원에는 자료의 진위 여부를 묻는 전화가 빗발쳤다. 학원측은 곧바로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삭제했지만 네티즌들이 각종 포털의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퍼나르면서 혼란을 부추겼다고 한다.

학원측은 지방의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뢰가 가지 않는다. 설사 학교나 교목청 등에서 자료를 입수했다더라도 문제가 심각하다. 일선 학교나 교육청, 교육

無等鼓

새 학기가 되면 학부모들은 어떤 교사가 자녀의 담임을 맡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기 마련이다. 담임교사가 누구냐에 따라 자녀들의 학교생활은 물론 성격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어느 교사는 어떻게더라'는 식의 입소문이 퍼져 있는 경우가 많다. 교사 자질에 대한 평가가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 내려져 있는 셈이다.

교사 자질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 교육계의 해묵은 숙제다. 국민의 정부 시절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자질이 떨어지면 교사를 교단에서 밀어내겠다'는 발언으로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몇년 전에는 이돈희 교육부장관이 '학원 강사에 비해 학교 교사들은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연구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 찬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부 교육전문가들은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로 실력과 인내심을 꼽는다. 실력이란 교사 본인의 임무인 가르치는 교과목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인내심

으로 대표되는 인성적 특징은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뜻한다. 교사는 학생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2008년 대학 신입생부터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거나 교직과목을 이수해도 평균 학점이 C+(75점)미만이면 중등 교원 자격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예비 중등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교원양성제도 개선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대학에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학 재학생 학업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을 교사로 양성하자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높은 학점을 받았다고 해서 훌륭한 교사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교육인적자원부의 이번 조치로 대학 재학생 중 부족한 인성 경험을 쌓기보다 학점 따기에 급급한 또 다른 '학습기계'가 양산되지 않을 까 우려된다.

/김재열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교사 자질



기고

공순환



우리교육은 그동안 다수의 학생들에게 많은 양의 교육을 한층 세우기의 획일적인 교육방법만을 고집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단편적인 우수인력을 대량생산하는 것이 가능했었다. 그 결과 오늘날의 경제성장을 가져온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방식은 다수의 교육받은 지식인을 요구하는 산업사회에서는 효과적이었지만, 이미 산업사회를 거쳐서 지식·정보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사회에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업무처리에 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되어 사람이 할 수 없는 초밀도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 사람은 기계에 기대할 수 없는 일 즉 창

과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평준화제도를 유지·발전시키면서,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보편성교육과 영재와 특별한 목적성을 갖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수월성교육을 동시에 꾀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학생들의 학습능력과 수준차가 심한 교과인 수학과 영어 교과에 수준별 수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며,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급 내 수준별 수업과 교실을 이동하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21세기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양성방안으로도 반드시 수준별 수업을 다른 교과에 까지 확대하

전통 학교 교육, 이젠 고집 할수 없다

의적이고 감성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의 일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비추어 볼 때, 대량교육의 획일적인 교육방법은 지양되어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사회일각에서는 이런 문제 해결책으로 고교평준화 제도의 폐지를 들고 있다. 이제 도는 간과해서는 안 될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사실상 학생들의 지식하향 평준화로 우수인재 양성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평준화 제도폐지만이 능사는 아니다.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학생들이 서로를 장점을 살려가고, 나의 부족함을 급우들로부터 도움 받아 채워나가는 등의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고 익혀내는 기회를 충분히 할 우려는 충분하다. 또한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학생들이 구분되는 '계층 간의 위화감'조성과 학력경쟁에 휘말릴 경우가 지금보다 훨씬 많지 않을 것은 불 보듯 훤히 보아진다. 그러기에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여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심화와 가정의 취약성, 급격한 도시화 등이 초래하는 교육 및 문화적 수혜기회 불평등으로 인한 발달단계에 있는 유·초·중등학생에게 교육복지 투자지원사업의 확장으로 교육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체험활동과 학습결손 예방, 치유, 방과 후 학교비 지원 등 교육복지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교육재정의 확충과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여 사교육비 절감, 가계경제 부담 감소, 학교 교육의 부실화 방지, 우수인재들의 조기 유학으로 해외 유출방지, 교육복지 투자사업 효율화의 성과를 가져오는 방향으로의 시행착오 없는 교육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학교 교육방식'으로는 더 이상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광주시 광산중학교장>

기고

김기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소비자로서 내가 낸 세금이 국가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될 수 있는 한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를 이용하거나, 현금을 사용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을 사용한 뒤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다양한 이점이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국세청에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이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도

도 탈세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일부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이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교묘한 방법을 동원한다. 소비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소비자가 구매할 물건값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부른 뒤 사업자는 기존 가격으로 영수증을 제시한다거나, 반대로 과격적인 가격할인을 제시해 영수증이 필요치 않은 현금거래를 유도하기도 한다. 때문에 현명한 소비자는 때로는 현명한 감시자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신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떠넘기는 경우 소비자들은 금융감독

세금 지킬 줄도 아는 소비자가 되자

받을 수 있다. 본인과 소득이 없는 가족(미성년 자녀 포함)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이용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운데 본인이 받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3천만원 소득자의 경우 450만원의 15%인 675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이밖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에게는 뜻하지 않은 '선물'이 제공된다. 매달 추첨을 통해 8천608명에게 4억 8천900만원 규모의 복권당첨금이 바로 그것이다.

소득공제는 물론 복권당첨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받기는 '내가 낸 세금은 내가 지킨다'는 중차대한 의미 외에,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사회 일각에서는 아직

원의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02-3771-5950~2)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이중가격 제시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로 전화하거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물건을 살 때 반드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일을 습관화해야 하는 일은 중요하다. 나아가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 신고하는 소비자들의 작은 노력이 있어야 투명한 과세가 이뤄지고 나아가 소득계층간, 업종간 과세형평성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 과세정착사업 업무는 분명 국세청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소비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을 때만 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국세청 세원관리 과장>

달력, 고급 용지 보다 재활용 종이 사용하는게 어떨까

새해를 앞두고 시중에 갖가지 그림과 사진을 담은 달력이 나오거나 제작중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달력 용지가 고급종이 일색이라는 점이 아쉽다. 달력의 용도는 요일 확인과 음력, 절기,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등 경조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족하다.

그런데 일회용이나 다름없는 달력에 비싼 최고급 용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지나친 낭비라고 생각한다. 집안 거실과 방마다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채로 서너개씩 방치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앞으로 달력을 제작할 때 고급적이면 재활용지를 사용하면 어떨까.

달력의 외형적인 면보다 이용자가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 속에 담긴 정보 내용에 더 충실해 주었으면 한다.

게다가 가격도 지나치게 크게 종이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또한 여분의 달력이 있다면 구석진 곳에 수장하지 말고 주변 양로원 등에 나눠주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웃간의 정을 돈독히 하고 자원절약 차원에서도 좋다고 생각한다.

▲최명연·광주시 서구 유충동

일부 의사들, 환자가 많다고 진료 소홀히 해서야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료를 끝낸 뒤 여러 가지 검사야 필요하니 일주일 뒤 다시 오라고 했다.

걱정스러워 아이 아빠까지 회사에 출차 휴가를 내고 갔는데 담당 의사가 휴가를 가 버려 아무런 진료도 받지 못한 채 와야했다.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줬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또 진료도 하고 예방 접종도 할겸 병원을

찾았을 때에는 대기자가 많다는 이유로 진료를 할 것인지, 접종을 할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당황해서 "네?"라고 했더니, 의사가 오늘은 특별히 진료와 예방 접종 두 개 다 해주겠다고 했다.

아무리 환자들이 많고 바쁘지만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김은화·광주시 북구 일곡동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29 문화체육부 2200-626
경 제 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사 회 1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F A X 222-4277) 조 사 부 2200-650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시 업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